

# 현안과 과제

■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도약과 민간소비의 역할  
- 선진국에선 도약의 디딤돌, 한국에선 걸림돌

□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도약과 민간소비의 역할  
- 선진국에선 도약의 디딤돌, 한국에선 걸림돌

■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도약을 위한 민간소비의 중요성

민간소비는 GDP의 절반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경제적 파급효과도 타 부문에 비해 월등히 높다. 하지만 최근 민간소비 증가율이 1%대를 지속하는 등 선진국으로의 도약이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 한국의 선진국 도약에 있어 민간소비 회복이 필수인 만큼, 앞서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달성한 선진국의 민간소비 역할을 분석,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국제비교를 통해 본 4만 달러 도약기의 민간소비 역할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도약 시기 민간소비 현황) 1인당 국민소득 도약 과정에 있어 선진국(미, 영, 독, 일)의 민간소비 증가율은 GDP 증가율을 지속 상회했다. GDP 대비 민간소비 비중도 2만 달러 도약기(평균 59.6%)→3만 달러 도약기(평균 60.7%)→4만 달러 도약기(평균 61.9%)로 지속 상승하였다. 반면 한국은 국민소득 도약 과정에 있어 민간소비 증가율이 GDP 증가율을 지속 하회하고, 민간소비 비중도 2만 달러 도약기 55.7%에서, 3만 달러 도약기에는 50.3%로 급락하여 선진국과 대비되는 양상이다.

(한국의 민간소비 하락 배경) 첫째, 선진국의 가계소득은 소폭 하락한 반면, 한국은 대폭 하락해 가계의 소비 여력이 축소되었다. 선진국의 가계소득/GNI 비중은 2000년 평균 76.8%에서 2012년 평균 74.1%로 2.7%p 하락한 반면, 한국은 동기간 6.4%p 크게 하락했다. 한편, 선진국의 가계소득분배율( $\frac{\text{가계소득}}{\text{국민처분가동소득(NDI)}}$ )은 2000년 평균 76.1%에서 2012년 평균 76.8%로 0.7%p 상승했지만, 한국은 동기간 7.2%p 크게 하락하여, 가계의 소비 여력이 크게 위축되었다. 둘째, 선진국의 국민부담률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중인 반면, 한국은 상승세가 지속되어 소비 위축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선진국의 국민부담률은 1978년 평균 29.1%에서 2012년 평균 30.9%로 1.8%p 상승한 반면, 한국은 동기간 9.0%p 대폭 상승하였다. 특히 선진국처럼 경제규모가 커지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들의 조세부담이 가중될 경우 소비를 위축시켜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 셋째, 선진국의 가계부채는 하락한 반면, 한국의 가계부채는 대폭 상승하여 민간소비 활성화를 제약하고 있다. 선진국의 가계부채/GDP 비율은 2002년 평균 79.0%에서 2013년 평균 77.7%로 1.3%p 하락한 반면, 한국은 동기간 15.0%p 크게 상승했다. 특히 가계부채 누증에 따른 이자 상환 부담 증가는 민간소비를 제약하여 경기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넷째, 선진국의 평균소비성향은 상승세로 반전한 반면, 한국은 하락세가 지속되어 소비 회복세가 지연되고 있다. 선진국의 평균소비성향은 2008년 평균 75.9%에서 2012년 평균 77.7%로 1.8%p 상승한 반면, 한국은 동기간 3.8%p 하락해 소비 회복세가 지연되고

있다. 한국의 평균소비성향 하락은 노후불안과 주거불안, 일자리불안 등이 주요 요인이며, 특히 고령화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한국의 초고령사회 진입 속도는 일본에 비해서도 매우 빠른 편이다.

종합적으로, 선진국의 경우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도약기 전후로 민간소비가 디딤돌 역할을 한 반면, 한국은 민간소비 부진 지속으로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주요 선진국과 한국의 민간소비 특징 비교 >

구분		주요 선진국	한국
현황	<b>소비 · GDP갭</b> <small>(소비증가율 - GDP증가율)</small>	2만달러시기 0.1%p에서 3만달러시기 0.5%p로 상승	2만달러시기 -1.3%p에서 3만달러시기 -1.1%p로 하락 지속
	$\frac{\text{민간소비}}{\text{GDP}}$	2만달러시기 59.6%에서 3만달러시기 60.7%로 상승	2만달러시기 55.7%에서 3만달러시기 50.3%로 대폭 하락
배경	$\frac{\text{가계소득}}{\text{GNI}}$	<b>소폭 하락</b> 76.8%(2000년)→74.1%(2012년)	<b>대폭 하락</b> 68.7%(2000년)→62.3%(2012년)
	<b>국민부담률</b> <small>(세금+사회보장기여금) GDP</small>	<b>소폭 상승</b> 29.1%(1978년)→30.9%(2012년)	<b>대폭 상승</b> 15.8%(1978년)→24.8%(2012년)
	$\frac{\text{가계부채}}{\text{GDP}}$	<b>하락</b> 79.0%(2002년)→77.7%(2013년)	<b>대폭 상승</b> 70.3%(2002년)→85.3%(2013년)
	<b>평균소비성향</b> <small>(소비지출) 가처분소득</small>	<b>소폭 상승</b> 75.9%(2008년)→77.7%(2012년)	<b>대폭 하락</b> 77.9%(2008년)→74.1%(2012년)

■ 시사점

민간소비가 위축될 경우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도약에 악영향을 미치며, 특히 메르스 등 경제 외적 돌발 변수는 소비 심리를 더욱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한국의 선진국 도약을 위해 경제 외적 변수가 소비 심리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가계소득 증대 방안 마련, 가계부채 관리, 노후 불안 해결, 주거 불안 개선 등을 통한 민간소비 회복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가계소득 증대를 위해 기업 규제 완화, 관광 산업 육성, 기업형 농가 확대 등 다양한 가계소득 증대 방안을 마련하고 지원해야 한다. **둘째**, 가계부채 문제로 민간소비가 위축되지 않도록 비거치식 금융상품 확대 등으로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억제해야 한다. **셋째**, 노후 불안 문제로 소득과 소비 지출의 연결고리가 약화되지 않도록 고령층 일자리 확충 등을 추진해야 한다. **넷째**, 주거 불안 문제로 소비가 위축되지 않게 공공임대주택 활성화, 저소득층 융자금 확대, 신혼부부 임대주택 제공 등을 모색해야 한다. **다섯째**, 중산층 복원 노력 확대로 민간소비 회복과 내수 경기 활성화를 모색해야 한다.

## 1.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을 위한 민간소비의 중요성

○ (연구배경) 한국의 선진국 도약에 있어 민간소비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최근 민간소비 부진이 지속되면서 선진국 도약에 걸림돌이 될 우려

- 선진국 도약 과정에서 민간소비의 중요성 : 한국의 민간소비는 GDP의 절반 가까운 비중을 차지, 경제적 파급효과도 타 부문에 비해 월등히 높음
  - GDP 비중 : 2014년 기준 민간소비는 약 749조원에 달하며, 이는 명목 GDP(1,485조원)에서 약 50.4%를 차지해 국민 경제에 있어 중요도가 높음
  - 파급효과 : 산업연관표 기준, 민간소비의 부가가치유발계수는 0.817로 가장 높고, 취업유발계수도 19.0명/10억 원으로 기타 항목들보다 높은 편임
  - 외수주도 성장 한계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수출중심국의 성장세가 약화, 따라서 한국의 선진국 도약을 위한 내수주도성장 패러다임 모색이 필요
- 민간소비 부진 지속 : 반면 최근 민간소비 증가율이 '1% 함정'에 빠지면서 선진국으로의 도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증대
  - 최근 민간소비 증가율은 3년째 1%대를 벗어나지 못하는 등 침체가 지속
  - 민간소비는 GDP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영향이 다른 부문보다 크기 때문에 소비 침체는 곧 한국 경제 침체로 직결
- 한국의 선진국 도약에 있어 민간소비 회복이 필수인 만큼, 앞서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달성한 선진국의 민간소비 역할을 분석, 시사점을 도출

< GDP 대비 민간소비 비중 >



자료 : 한국은행. 주 : 명목기준.

< 민간소비 및 GDP 증가율 >



자료 : 한국은행. 주 : 전년동기대비.

○ (연구방법) 한국과 주요 선진국의 1인당 국민소득 도약기별 민간소비 현황을 비교하고, 선진국 대비 한국의 민간소비 침체 배경을 분석

- 분석 목적 :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달성한 선진국들과 한국의 민간소비 현황을 비교하여, 한국의 선진국 도약 과정에서의 민간소비 활성화를 모색
- 분석 대상 국가 : ‘30-50 클럽’<sup>1)</sup>에 진입한 나라 중 미국, 영국, 독일, 일본임
  - 비교대상 국가 선정 기준은 ‘30-50 클럽’ 가운데 우리와 산업구조가 유사한 독일, 일본을 비롯해 대표 선진국인 미국과 영국 등 총 4개국으로 한정
  - 주요 선진국의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 시점은 주로 1990년대에 집중, 4만 달러 달성 시점은 일본을 제외하고 2000년대 중후반 수준임<sup>2)</sup>
- 분석 방법 : 한국과 주요 선진국의 1인당 국민소득 도약기별 민간소비 역할을 분석하고, 선진국 대비 한국의 민간소비 침체 배경을 요인별로 분석
  - 현황 비교 : 선진국과 한국의 국민소득 도약기별(2,3,4만 달러) 민간소비 역할을 알아보하고자 민간소비 증가율, GDP 대비 민간소비 비중의 추이 분석
  - 배경 비교 : 선진국 대비 한국의 민간소비 침체 요인을 알아보하고자 소득, 국민부담률, 가계부채, 고령화에 따른 평균소비성향 변화 추이 등을 분석

< 주요 선진국과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 도약기별 민간소비 특징 비교 >

구분	주요 내용
민간소비 현황	- 선진국 도약기별 민간소비 증가율 및 비중 분석 · 분석대상 : 주요 선진국(미, 영, 독, 일) 및 한국 · 분석방법 : 국민소득 도약기별 민간소비 변화 추이
한국의 민간소비 침체 배경	- 선진국과 한국의 주요 특징 비교 · 실질소득 : 가계소득/GNI, 가계소득/NDI 비중 비교 · 비소비지출 : 국민부담률 비교 · 가계부채 : 가계부채/GDP, 가계부채/가처분소득 비교 · 평균소비성향 : 고령화 추이 및 평균소비성향 비교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정리.

주 : 1) 통계는 OECD와 각 국가별 가계소비지출 서베이 자료를 활용.

2) 주요 선진국 별 소득 목표 달성 시점 및 달성 시기는 참고자료를 참조.

1) ‘30-50 클럽’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을 비롯해, 인구 5천만 명 이상인 국가를 의미함. 2015년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이탈리아 등 6개국이 해당됨.

2)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의 참고자료를 참조.

## 2. 국제비교를 통해 본 4만 달러 도약기의 민간소비 역할

### 1)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도약 시기 민간소비 현황

○ 선진국 도약 시기 주요국의 민간소비 증가율은 GDP 증가율을 상회하고, GDP 대비 민간소비 비중도 높은 수준. 반면 한국은 민간소비 증가율이 GDP 증가율을 하회하고, 민간소비 비중도 크게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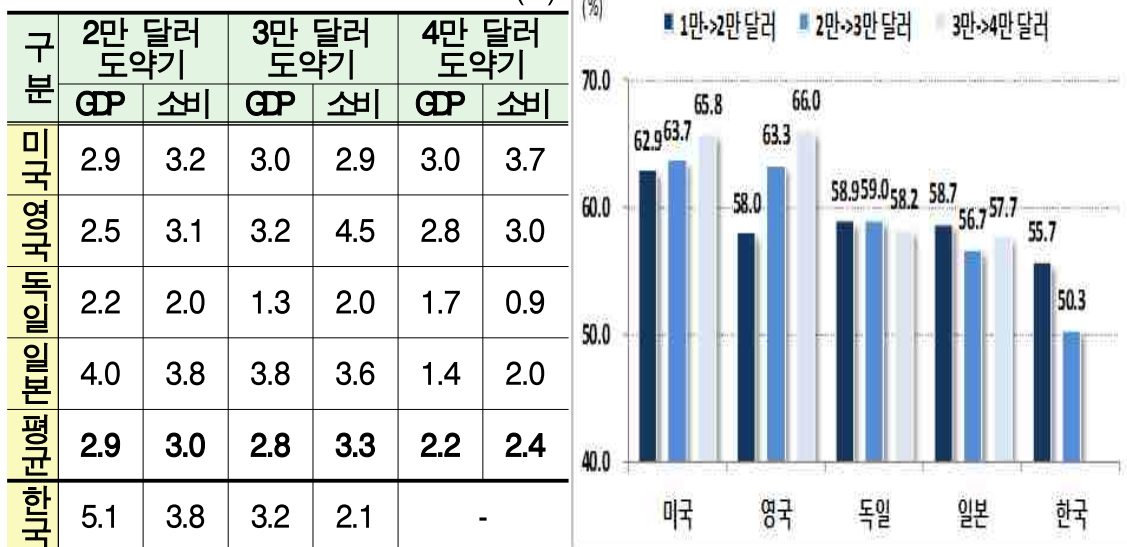
- **민간소비 증가율** : 1인당 국민소득 도약 과정에서 선진국의 민간소비 증가율은 GDP 증가율을 지속 상회했으나, 한국은 지속 하회

- 선진국의 민간소비 연평균 증가율은 GDP 증가율을 지속 상회했고, 특히 3만 달러 도약기에서는 소비증가율(3.3%)이 GDP증가율(2.8%)을 0.5%p 상회
- 반면 한국의 경우 민간소비 연평균 증가율이 GDP 증가율을 지속 하회

- **민간소비 비중** : 1인당 국민소득 도약 과정에서 선진국의 GDP 대비 민간소비 비중은 지속 상승했으나, 한국은 크게 하락

- 선진국의 GDP 대비 민간소비 비중은 2만 달러 도약기(평균 59.6%)→3만 달러 도약기(평균 60.7%)→4만 달러 도약기(평균 61.9%)로 지속 상승
- 반면 한국의 GDP대비 민간소비 비중은 2만 달러 도약기 55.7%에서, 3만 달러 도약기에는 50.3%로 급락하여 선진국과 대비되는 양상

< 선진국의 GDP 및 민간소비 연평균 증가율 > < 선진국의 GDP 대비 민간소비 비중 >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OECD 통계를 이용해 자체 계산).



## 2) 한국의 민간소비 하락 배경

○ (실질 소득) 선진국의 가계소득은 소폭 하락한 반면, 한국은 대폭 하락해 가계의 소비 여력이 축소

- 국민총소득 대비 가계소득 비중 하락 추이는 선진국에서도 모두 동일하게 나타났으나, 선진국 대비 한국의 하락폭이 매우 큰 편

- 선진국의 가계소득/GNI 비중은 2000년 평균 76.8%에서 2012년 평균 74.1%로 2.7%p 소폭 하락한 반면, 한국은 동기간 6.4%p 대폭 하락
- 선진국 국가별 2000년 대비 2012년 가계소득/GNI 비중의 하락폭을 살펴보면, 미국은 -4.0%p, 독일 -3.2%p, 일본 -2.8%p, 영국 -0.9%p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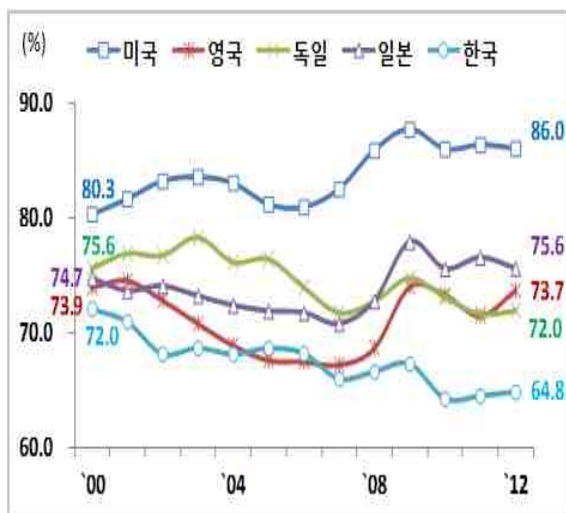
- 한국의 가계소득분배율도 선진국에 비해 하락세가 매우 빠른 편임

- 선진국의 가계소득분배율( $\frac{\text{가계소득}}{\text{국민처분가능소득(NDI)}}$ )은 2000년 평균 76.1%에서 2012년 평균 76.8%로 0.7%p 상승
- 특히 영국과 독일의 경우 2000년 대비 2012년 각 각 0.2%p, 3.6%p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70%대를 유지 중
- 반면 한국의 가계소득분배율은 2000년 72.0%에서 2012년 64.8%로 7.2%p 크게 하락하여, 가계의 소비 여력이 크게 위축

< 선진국의 GNI 대비 가계소득 비중 >  
(%)

구분	2000	2005	2010	2012
미국	82.4	79.2	77.9	78.4
영국	75.2	71.5	72.9	74.3
독일	80.2	77.2	76.1	77.0
일본	69.4	65.2	65.4	66.6
평균	76.8	73.3	73.1	74.1
한국	68.7	65.9	62.0	62.3

< 선진국의 가계소득분배율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OECD 통계를 이용해 자체 계산).

주 : 1) 선진국의 GNI 대비 가계소득 비중은 OECD 자료의 한계로 2000년부터 비교.

2) 가계소득분배율이란 국민처분가능소득(NDI)에서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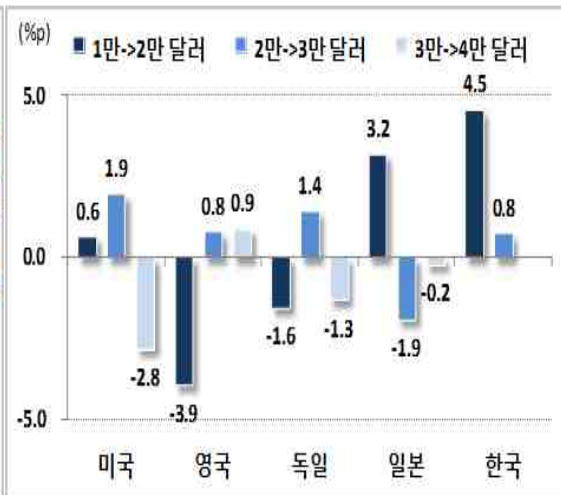
○ (국민부담률<sup>3)</sup>) 선진국의 국민부담률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중인 반면, 한국은 상승세가 지속되어 소비 위축 요인으로 작용

- 선진국의 국민부담률은 안정화 추세이나 한국은 반대로 빠르게 상승 중
  - 선진국의 국민부담률은 1978년 평균 29.1%에서 2012년 평균 30.9%로 1.8%p 상승한 반면, 한국은 동기간 9.0%p 대폭 상승
  - 1978~2012년간의 장기 추세로 보더라도 선진국들의 국민부담률은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거나 낮아지는 반면, 한국은 빠르게 상승하는 추세
-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2만 달러 도약기에서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으며, 이에 따라 국민의 조세부담이 가중
  - 한국의 국민부담률 증가폭은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도약기에서 4.5%p를 기록해 일본의 3.2%p보다 높았음. 반면 영국과 독일은 오히려 감소
  - 한편 선진국의 국민부담률 증가폭은 4만 달러 도약기에서는 모두 크게 하락해 국민의 조세부담률이 크게 감소
  - 특히 선진국처럼 경제규모가 커지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들의 조세부담이 가중될 경우 소비를 위축시켜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음

< 선진국의 국민부담률 추이 >



< 선진국의 국민부담률 변화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OECD 통계를 이용해 자체 계산).

주 : 1) 선진국의 국민부담률 추이 비교 시점은 미국의 국민소득 1만 달러 진입시점부터 2012년까지임(일본의 2013년 통계 미비로 2012년까지 비교).

2) 국민부담률 변화 비교는 각 도약기별 최종년도와 최초년도의 차이 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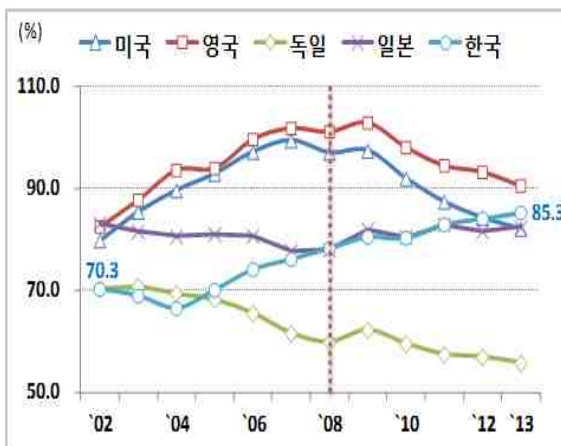
3) 국민부담률이란 조세부담률(GDP에 대한 조세 총액 비율)+사회보장부담률(GDP에 대한 4대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기금 등 각종 사회보장성 기여금의 총액 비율)을 의미함.



○ (가계부채) 선진국의 가계부채는 지속 하락한 반면, 한국의 가계부채는 대폭 상승하여 민간소비 활성화를 제약

- 2008년 위기 직후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은 가계부채 조정과정을 거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급증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의 가계부채는 지속적으로 감소
  - 반면 한국의 경우 2008년 이후 경제성장률이 3~4%대로 둔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4)
- 선진국의 가계부채/GDP 비율은 금융위기 이후 모두 감소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지속적으로 증가
  - 선진국의 가계부채/GDP 비율은 2002년 평균 79.0%에서 2013년 평균 77.7%로 1.3%p 하락한 반면, 한국은 동기간 15.0%p 크게 상승
  - 특히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3년 기준 85.3%를 기록
- 또한 가계부채/가처분소득 비율도 한국만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
  - 선진국의 가계부채/가처분소득 비율은 2002년 평균 124.1%에서 2013년 평균 121.9%로 2.2%p 하락한 반면, 한국은 동기간 29.6%p 크게 상승
  - 특히 최근 한국경제의 저성장 기조 지속으로 가계부채 누증에 따른 부담 증가는 민간소비를 제약하여 경기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 선진국의 가계부채/GDP 비율 >



< 선진국의 가계부채/가처분소득 비율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OECD 통계를 이용해 자체 계산).

주 : OECD 통계자료 한계로 2002년부터 분석.

4) OECD 가계부채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00~2013년 간 한국의 가계부채 연평균 증가율은 7.8%에 달하나, 동기간 미국 4.2%, 영국 4.8%, 독일 0.1%, 일본 -0.4% 수준을 기록.

○ (평균소비성향) 선진국의 평균소비성향은 상승세로 반전한 반면, 한국은 하락세가 지속되어 소비 회복세가 지연

- 선진국 대비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매우 빠른 편이며, 국민의 연금 가입률도 낮아 노후대책 준비가 열악한 수준

- 한국은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사회 진입까지 26년 소요에 불과해, 일본의 35년에 비해서도 초고령사회 진입 속도가 상당히 빠른 편임
- 또한 2011년 기준 주요 선진국의 연금 가입률(퇴직 38% 이상, 개인 24% 이상)은 비교적 높은 반면, 한국은 퇴직연금 18.8%, 개인연금 12.2% 수준으로 노후 대책 준비가 열악한 편임<sup>5)</sup>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의 평균소비성향은 상승세로 반전한 반면, 한국은 고령화에 따른 노후 준비 부족 등으로 지속 하락

- 선진국의 평균소비성향은 2008년 평균 75.9%에서 2012년 평균 77.7%로 1.8%p 상승한 반면, 한국은 동기간 3.8%p 하락
- 평균소비성향이 하락하는 주된 요인은 노후불안과 주거불안, 일자리불안 등이며 특히 고령화가 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존재<sup>6)</sup>

< 선진국의 고령화 속도 비교 >

구분	도달 년도			도달 년수	
	7%	14%	20%	7%→14%	14%→20%
미국	1942	2014	2029	72	15
영국	1929	1975	2025	46	50
독일	1932	1972	2008	40	36
일본	1970	1994	2005	24	11
한국	2000	2018	2026	18	8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OECD 통계 활용).  
 주 : 고령화사회는 7%, 고령사회는 14%, 초고령사회는 20%임.

< 선진국의 평균소비성향 비교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각 국별 가계지출조사<sup>7)</sup>).  
 주 : 한국과 비교를 위해 2003년부터 분석.

5) OECD 보고서(OECD, Pension at a glance 2011)에 따르면, 선진국의 퇴직연금 가입률(영국:49.1%, 미국:32.8%, 독일:32.2%)과 개인연금 가입률(독일:29.9%, 미국:24.7%, 영국:18.1%)은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  
 6) 현대경제연구원, “평균소비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과 시사점” 『경제주평』 13-44.을 참조.  
 7) 각 국가별 가계지출조사 데이터는 미국은 가계소비지출조사(CE : Consumer Expenditure Survey), 영국은 가구지출조사(FES : Family Spending Survey), 독일은 가계지출서베이(Continuous household budget survey : LWR), 일본은 가계동향조사, 한국은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를 활용.

- (종합평가) 비교 분석결과, 선진국의 경우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도약기 전후로 민간소비가 디딤돌 역할을 한 반면, 한국은 민간소비 부진 지속으로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주요 선진국 대비 한국의 민간소비 역할은 미약한 수준
    - 민간소비 증가율 : 1인당 국민소득 도약 과정에 있어 선진국의 민간소비 증가율은 GDP 증가율을 지속 상회한 반면, 한국은 하락세 지속
    - 민간소비 비중 : 선진국의 민간소비/GDP 비중은 지속 상승한 반면, 한국은 2만 달러 도약기 55.7%에서 3만 달러 도약기 50.3%로 대폭 하락
  - 한국은 주요 선진국 대비 낮은 가계소득, 국민부담률 대폭 상승, 가계부채 증가세 확대 등으로 민간소비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
    - 가계소득/GNI : 선진국은 2000년 평균 76.8%에서 2012년 평균 74.1%로 소폭 2.7%p 하락한 반면, 한국은 동기간 6.4%p 크게 하락
    - 국민부담률 : 선진국은 1978년 평균 29.1%에서 2012년 평균 30.9%로 1.8%p 소폭 상승한 반면, 한국은 동기간 9.0%p 대폭 상승
    - 가계부채/GDP : 선진국은 2002년 평균 79.0%에서 2013년 평균 77.7%로 1.3%p 하락한 반면, 한국은 동기간 15.0%p 크게 상승

< 주요 선진국과 한국의 민간소비 특징 비교 >

구분		주요 선진국	한국
현황	소비 · GDP갭 (소비증가율 - GDP증가율)	2만달러시기 0.1%p에서 3만달러시기 0.5%p로 상승	2만달러시기 -1.3%p에서 3만달러시기 -1.1%p로 하락 지속
	민간소비 GDP	2만달러시기 59.6%에서 3만달러시기 60.7%로 상승	2만달러시기 55.7%에서 3만달러시기 50.3%로 대폭 하락
배경	가계소득 GNI	소폭 하락 76.8%(2000년)→74.1%(2012년)	대폭 하락 68.7%(2000년)→62.3%(2012년)
	국민부담률 (세금+사회보장기여금) GDP	소폭 상승 29.1%(1978년)→30.9%(2012년)	대폭 상승 15.8%(1978년)→24.8%(2012년)
	가계부채 GDP	하락 79.0%(2002년)→77.7%(2013년)	대폭 상승 70.3%(2002년)→85.3%(2013년)
	평균소비성향 (소비지출) 가처분소득	소폭 상승 75.9%(2008년)→77.7%(2012년)	대폭 하락 77.9%(2008년)→74.1%(2012년)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평가.

### 3. 시사점

- 민간소비가 위축될 경우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도약에 악영향을 미치며, 특히 메르스 충격 등 경제 외적 변수로 소비 심리 위축 우려
  - 최근 발생한 경제 외적 변수들은 소비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 2014년 1분기 108을 기록한 소비자심리지수는 세월호 충격 직후 104로 급락했고, 2015년 5월 현재 105 수준을 기록 중
    - 특히 최근 메르스 사태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이 우려되며, 결국 소비 위축은 소매판매 및 서비스업 불황 등 내수 경기 침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따라서 경제 외적 변수가 소비 심리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이를 토대로 선진국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야 함
-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가계소득 증대 방안을 마련하고, 가계부채 관리, 노후 불안 해결, 주거 불안 개선 등의 민간소비 회복 노력이 필요
  - 첫째, 가계소득 증대를 위해 기업 규제 완화, 관광 산업 육성, 기업형 농가 확대 등 다양한 가계소득 증대 방안을 마련하고 지원
    - 기업의 고용 창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한편, 규제 완화를 통한 투자 여건 개선 등으로 기업이 좋은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도록 유도
    - 기업형 농가를 육성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한편, 한중 FTA 활용으로 중국 소득상위계층을 겨냥한 고부가가치 농산물 수출도 적극 모색
    - 또한 관광업의 60%가 중국, 베트남 등 근거리 관광임을 감안할 때, 고용 창출력이 높은 관광산업을 적극 육성해 내수 활성화를 모색
    - 한편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 저소득층 바우처 지급 등의 정책도 적극적으로 고려
  - 둘째, 가계부채 문제로 민간소비가 위축되지 않도록 비거치식 금융상품 확대 등으로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억제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가계부채를 줄여왔으나 한국의 가계부채는 소득 증가속도 보다 빠르게 증가하여 우려가 확대

- 따라서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늦추기 위해 신규대출에 한해 비거치식 금융 상품을 확대면서, 상환 초기부터 원금을 상환해 부채 확대를 방지
  - 또한 저소득층 가계의 부채 상환 능력을 높이기 위해 사교육비, 통신비, 주거비 등 가계의 생계비 부담 완화 대책 등도 적극 고려
- 셋째, 노후 불안 문제로 소득과 소비 지출의 연결고리가 약화되지 않도록 고령층 일자리 확충 등을 추진
- 고령층 일자리 확충을 위해 65세 이상 인구가 최저생계비 수준의 노후소득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공공근로사업(public laboring project)을 확대할 필요
  - 특히 퇴직 후 다시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소위 가교일자리(bridge job) 마련
  - 또한 근로능력이 없는 저소득 노인가구를 위해서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공적 이전소득이 제공되는 소득재분배 정책을 확대
- 넷째, 주거 불안 문제로 소비가 위축되지 않게 공공임대주택 활성화, 저소득층 용자금 확대, 신혼부부 임대주택 제공 등을 모색
- 공공임대주택 활성화는 주거 불안 해소 뿐 아니라 경기 활성화, 일자리 창출, 소비 진작 등 부수적인 효과가 다수
  - 따라서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하는 한편,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차인 보조금 확대, 저리 용자금 확대 등을 적극 고려
  - 또한 결혼율과 출산율 제고를 비롯해, 새로운 중산층 육성 차원에서 신혼부부 가운데 소득 하위 20%에 한정해 도심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정책도 고려
  - 한편 가계 원리금 상환 구조를 선진국 수준(20~30년)으로 장기화함으로써 가계의 소비 여력을 확충
- 다섯째, 중산층 복원 노력 확대로 민간소비 회복과 내수 경기 활성화 모색
- 통계청에 따르면 체감중산층 비중은 2003년 56.2%에서 2013년 51.4%로 하락
  - 특히 중산층은 생산과 소비의 핵심 계층으로 중산층 복원이 늦어질수록 민간 소비 회복이 지연될 뿐 아니라, 한국의 선진국 도약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
  - 따라서 중산층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소득 개선과 주거 및 교육비 등 지출 부담 완화, 여가 활용을 통한 오락·문화 소비 확대를 유도해야 함

경제연구본부 이용화 선임연구원 (2072-6222, yhlee@hri.co.kr)

< 참고자료 > 주요 선진국의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도달 시점과 기간

- 주요 선진국 평균으로 보면 국민소득 1만 달러에서 4만 달러에 도달하는데 소요된 기간은 평균 22년임
  - 한국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들의 국민소득 1~2만 달러에 도달하는 기간은 평균 8.8년이 소요, 2~3만 달러까지는 7년이 소요
  - 반면 동기간 대비 한국은 각 각 11년과 9년 소요로 선진국의 국민소득 목표 달성 기간 대비 늦은 편임
  - 한편 선진국의 1인당 국민소득 3~4만 달러 도달 기간은 평균 6년이 소요
- 주요 선진국의 1인당 국민소득 목표 달성시점에 비해 한국의 달성 수준은 다소 늦은 편임
  - 주요 선진국의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 진입은 주로 70년대 후반과 80년대 초중반에, 2만 달러 진입년도는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중반에 집중
  - 또한 3만 달러 및 4만 달러 진입은 일본이 각각 1992년과 1995년도로 가장 빠른 편임
  - 한국은 1995년에 국민소득 1만 달러를, 2만 달러는 2006년에 달성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다소 늦은 편임

< 주요 선진국의 소득 목표 달성 기간 >

구분	1인당 국민소득 진입년도				달성기간(년)		
	1만 달러	2만 달러	3만 달러	4만 달러	1→2만	2→3만	3→4만
미국	1978 (1978~1986)	1987 (1987~1996)	1997 (1997~2003)	2004	9	10	7
영국	1986 (1986~1994)	1995 (1995~2002)	2003 (2003~2004)	2005	9	8	2
독일	1979 (1979~1989)	1990 (1990~1994)	1995 (1995~2006)	2007	11	5	12
일본	1981 (1981~1986)	1987 (1987~1991)	1992 (1992~1994)	1995	6	5	3
한국	1995 (1995~2005)	2006 (2006~2015)	2015	-	11	9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OECD 통계를 이용해 자체 계산).

주 : 1) 1, 2, 3, 4만 달러 도달시점은 최초 도달 연도 기준임.

2) 한국의 3만 달러 도달시점은 2015년으로 가정, 실제 데이터는 2014년 값을 적용함.